

「2026년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사업」 구미 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안전솔루션 서비스 수혜기업 모집 공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체계적인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스마트 안전솔루션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스마트 안전솔루션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산업단지 안전관리
- 모집대상 : 구미국가산업단지(1~4공단) 특별안전구역 내 입주업체
 - ※ 특별안전구역 : 산단 내 위험지역(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 노후공장 밀집 등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작업자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공장 및 그 인근지역) 및 고위험 공장을 특별안전구역(Safety Zone)으로 집중 지원
 - ※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안전구역 해당 여부는 담당자에서 확인 필요
- 보급 솔루션(지정된 솔루션 보급)
 - 전기화재 안전솔루션 : 전기화재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화재 발생 예방, 기업 내 분전반(단상)에 설치
 - 화재감지 안전솔루션 : 멀티센서를 이용하여 정확도 높은 화재감지
 - ※ 2가지 솔루션 모두 현장 모니터링 및 알림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구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접수 마감까지 상시 접수
- 지원방법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지정된 안전솔루션을 직접 보급

2.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솔루션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2개 솔루션 중복지원 가능)
- 스마트 안전 솔루션 시스템 구성



3. 추진일정

단 계	내 용	비 고
공고/접수 (10월~)	· 지원사업 공고 · 관련 양식에 의거 온/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GERI
↓		
현장방문(10월)	· 신청기업 사업장 환경 검토 · 수해기업 선정	GERI → 신청기업
↓		
솔루션 설치 (10월~11월)	· 수해기업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	GERI → 수해기업
↓		
솔루션 운영 (10월~)	· 수해기업에서 설치된 스마트 안전솔루션 운영	수해기업
↓		
만족도 조사 (12월)	· 스마트 안전솔루션 운영 관련 의견 청취	GERI → 수해기업

※ 지원 기관별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은 지원 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선착순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선정

□ 선정결과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E-mail을 통해 개별통지

5.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마감시까지
- 신청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추가 증빙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접수처로 관련 파일 이메일 접수 혹은 직접(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담당자 : 제조AX연구센터 변상봉 책임연구원
- 연락처 : 054-460-9020 / sbbyun@geri.re.kr
- 주 소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기술센터 209호

□ 제출서류

1. 스마트안전솔루션 수혜기업 참여 신청서
2. 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서식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6.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메일로 담당자에게 송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개별 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7. 지원제외사항

- 신청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등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